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 경험과 평가

고려대학교

신관호

2015년 7월

발표 순서

1. Motivation
2. 한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제(IT) 도입
3. 한국의 IT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국가간 비교
 - Taylor 준칙으로 해석한 한국의 경험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
5. 결론

1. Motivation

Motivation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 정책은 매우 큰 변화를 겪음.
- 통화정책 형태가 인플레이션 타겟팅(IT)으로 전환됨.
-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IT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본 발표는 변화된 상황 하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IT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의할 것임.

2. 한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제(IT) 도입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

-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량목표제에 의해 통화정책을 운영
- 통화량목표제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노출됨.
Ex) 1996년 금전신탁 규제
- 뿐만 아니라 환율제도에 도 문제점이 드러남
-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외환위기에 취약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 (cont.)

- 1990년 뉴질랜드를 필두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남
 - 캐나다(1991년), 영국(1992년), 스웨덴과 호주(1993년)
- 이들 국가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신흥시장국가들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남
 - 이스라엘(1997년), 체코(1998년), 폴란드(1998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 1998년 발효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설립의 유일한 목적은 물가안정임.
- 2001년까지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함께 사용되던 통화지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감시지표로만 사용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인플레이션 타겟팅(IT: Inflation Targeting) 정책 실시.
-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적용기간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한은법 개정

-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
 -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목표 조항에 포함
 - 거시건전성분석국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
-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어떻게 고려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 금융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물가목표를 희생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거시건전성 도구는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

3. 한국의 IT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IT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1990년 뉴질랜드가 IT 정책을 채택한 이래 동 정책을 채택한 국가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 2014년말 현재 30여개국에서 운용
-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IT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주요국가들인 미국이나 유로국가에 비해 더 나은 점은 별로 없다는 평가도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한 국가들 중에는 이를 버리고 다른 형태의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예가 없음.
- 미국과 ECB도 장기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제시하는 등 IT와 유사한 정책을 사용

한국에서의 IT정책 성과분석

- 기간: 글로벌 위기전 (2000년 1/4 - 2007년 4/4)
글로벌 위기후(2008년 1/4 - 2013년 3/4)
- 비교 대상국가: 동기간 동안
IT정책을 수행한 15개 국가(선진산업 국가
6개와 신흥시장 국가 9개)와
IT를 채택하지 않은 대표적 8개
국가들(선진산업 국가 2개와 신흥시장국가
6개) 선정*.

* IT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 인도네시아는 2007년 7월부터 IT를
채택

인플레이션 수준, 변동성, 지속성

		수준(연별자료)		변동성(분기자료)		지속성(분기자료)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IT 국가		3.12	2.91	1.45	1.39	0.73	0.77
	선진산업국가	1.78	1.79	0.68	1.23	0.65	0.74
	오스트레일	3.19	2.77	1.17	1.01	0.68	0.73
	캐나다	2.31	1.64	0.75	1.03	0.53	0.73
	뉴질랜드	2.55	2.50	0.71	1.49	0.61	0.75
	스웨덴	1.49	1.32	0.87	1.59	0.75	0.81
	영국	1.59	3.15	0.60	0.91	0.82	0.67
	스위스	0.95	0.33	0.46	1.15	0.53	0.76
	신흥시장국가	3.85	3.56	1.91	1.52	0.78	0.79
	브라질	7.29	5.64	3.40	0.80	0.86	0.68
	칠레	3.08	3.29	1.33	2.96	0.64	0.83
	콜롬비아	6.43	3.68	1.56	1.85	0.89	0.87
	체코	2.58	2.58	1.52	2.00	0.80	0.76
	이스라엘	1.52	2.88	2.30	1.17	0.81	0.81
	한국	2.97	2.98	0.81	1.18	0.62	0.81
	멕시코	5.21	4.32	1.91	0.91	0.82	0.72
	페루	2.16	3.35	1.34	1.67	0.75	0.85
	폴란드	3.43	3.29	3.05	1.14	0.87	0.74
Non-IT 국가		5.72	8.17	3.41	2.26	0.72	0.73
	선진산업국가	2.20	1.79	0.64	1.24	0.59	0.73
	독일	1.62	1.61	0.48	0.84	0.51	0.79
	미국	2.78	1.97	0.79	1.63	0.67	0.67
	신흥시장국가	6.90	10.30	4.33	2.61	0.77	0.72
	아르헨티나	8.89	9.29	10.84	1.63	0.83	0.86
	홍콩	-0.80	3.48	2.28	1.89	0.83	0.77
	인도	4.55	10.05	1.23	2.08	0.73	0.66
	인도네시아	8.74	5.96	4.24	2.50	0.70	0.77
	싱가포르	0.96	3.68	0.99	2.21	0.62	0.79
	베네수엘라	19.04	29.31	6.44	5.32	0.91	0.51

기본통계량 분석 I: 인플레이션

- 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위기전, 후 모두 약 3%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
- IT를 채택한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들도 글로벌 위기 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보임
- 하지만 NIT(Non-IT) 신흥시장국가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인플레이션: 변동성

- 변동성은 위기 후 약간 높아졌으나 다른 선진 IT 국가와 신흥시장국가 IT 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나쁘지 않음.
- 신흥시장 NIT 국가들의 변동성은 신흥시장 IT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 NIT 국가들의 변동성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플레이션: 지속성

- IT의 성과를 살펴 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은 중요한 지표.
-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충격이 오는 경우에도 IT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쉽게 원래 수준을 회복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
- 한국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은 위기 이전 낮은 편이었으나 위기 이후는 증가하여 IT 국가 평균을 상회
- 위기 이후에는 IT국가와 NIT 국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음

이자율 수준, 변동성, 지속성

		수준(연별자료)		변동성(분기자료)		지속성(분기자료)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IT 국가		6.58	3.72	2.07	1.46	0.87	0.79
	선진산업국가	5.49	2.98	0.99	1.34	0.89	0.74
	오스트레일	5.4	4.2	0.64	1.34	0.86	0.77
	캐나다	3.5	1.2	1.17	0.93	0.90	0.72
	뉴질랜드	6.3	3.4	0.97	1.98	0.86	0.81
	스웨덴	1.4	0.0	0.90	1.35	0.93	0.81
	영국	5.7	4.7	0.82	1.70	0.85	0.76
	스위스	10.6	5.6	1.09	0.71	0.93	0.59
	신흥시장국가	7.31	4.08	2.82	1.54	0.86	0.82
	브라질	17.52	10.09	3.49	1.92	0.82	0.85
	칠레	4.93	4.18	2.63	2.31	0.73	0.84
	콜롬비아	7.83	5.16	1.98	2.44	0.91	0.86
	체코	3.28	1.68	1.31	1.20	0.92	0.85
	이스라엘	6.09	2.35	1.72	0.96	0.84	0.71
	한국	4.25	2.95	0.62	0.99	0.90	0.77
	멕시코	9.60	5.50	3.70	1.46	0.86	0.85
	페루	8.68	3.96	4.51	1.53	0.86	0.83
	폴란드	3.63	0.81	5.43	1.06	0.94	0.79
Non-IT 국가		5.44	3.61	5.03	1.81	0.85	0.63
	선진산업국가	3.51	0.96	1.49	1.03	0.93	0.72
	독일	2.31	0.73	1.07	1.25	0.93	0.82
	미국	4.72	1.19	1.91	0.80	0.94	0.62
	신흥시장국가	6.22	4.49	6.44	2.07	0.81	0.59
	아르헨티나	12.51	10.38	16.14	1.46	0.75	0.40
	홍콩	2.70	0.12	1.98	0.52	0.86	0.34
	인도		8.21		2.98		
	인도네시아	9.25	6.02	3.71	1.67	0.86	0.91
	싱가포르	3.19	1.77	0.97	0.34	0.93	0.78
	베네수엘라	3.43	0.44	9.43	5.46	0.67	0.52

기본통계량 분석 II: 이자율

- 이자율 수준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의 이자율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 하락은 국내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
 - 위기 이후, 홍콩 및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신흥시장 국가들 중에서도 체코, 이스라엘,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은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
- ➔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 추후 Taylor 분석 참조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가목표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간주하고 단기적으로는 산출량을 잠재수준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신축적 운영을 허용
-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도록 중앙은행의 신뢰성 있는 공약이 수반되어야 함

총생산갭 변동성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IT 국가	1.65	1.70	2.36	1.76
선진산업국가	1.20	1.56	2.01	1.75
오스트레일리아	0.64	0.65	0.58	0.71
캐나다	0.86	1.42	1.15	1.67
뉴질랜드	1.22	1.08	1.95	0.56
스웨덴	1.52	2.37	2.26	2.55
영국	1.10	1.67	2.73	2.43
스위스	1.28	1.28	1.95	1.56
신흥시장국가	2.01	1.89	2.75	1.88
브라질	3.20	2.63	3.44	2.36
칠레	1.57	1.99	2.02	2.16
콜롬비아	1.49	1.26	2.52	1.33
체코	2.01	2.05	3.42	3.35
이스라엘	1.97	0.90	3.40	0.90
한국	1.01	1.44	0.92	1.26
멕시코	1.67	2.24	2.30	2.80
페루	3.88	3.55	4.14	1.81
폴란드	1.34	0.96	2.63	0.99
Non-IT 국가	3.08	2.35	4.59	2.66
선진산업국가	1.28	1.73	1.82	2.08
독일	1.35	2.13	1.71	2.61
미국	1.21	1.32	1.93	1.55
신흥시장국가	3.80	2.59	5.51	2.86
아르헨티나	4.95	2.17	8.48	2.72
홍콩	2.61	2.28	3.81	2.27
인도			4.56	2.27
인도네시아	1.58	1.53	2.51	1.24
싱가포르	2.98	3.70	4.50	3.75
베네수엘라	6.86	3.29	9.19	4.89

기본통계량 분석 III: 총생산갭

- 한국의 총생산갭 변동성은 위기전이나 위기후 모두 매우 양호한 편임.
 - 위기전 위기후 모두 신흥시장국가의 경우 IT국가들이 NIT국가에 비해 총생산갭 변동성이 낮은 편임
 - 총생산갭 변동성은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 ➔ 한국의 통화정책은 경기변동에 대체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추후 Taylor 분석 참조

테일러 준칙 추정 결과

- Clarida et al.(1998)의 specification:

$$i_t = (1 - c_1)(c_2 + c_3 E(\pi_{t+4}/\Omega_t) + c_4(E(y_t/\Omega_t) - y_t^*)) + c_1 i_{t-1} + \varepsilon_t$$

I. 기간: 2001Q1- 2014Q4

	c1		c2		c3		c4	
YoY	0.9010	***	4.9307	***	-0.7668		2.2656	***
	0.0190		1.4898		0.5135		0.4573	
QoQ	0.8993	***	4.1950	***	-0.4401		2.3172	***
	0.0254		1.5450		0.5900		0.6002	

테일러 준칙 추정 결과 (c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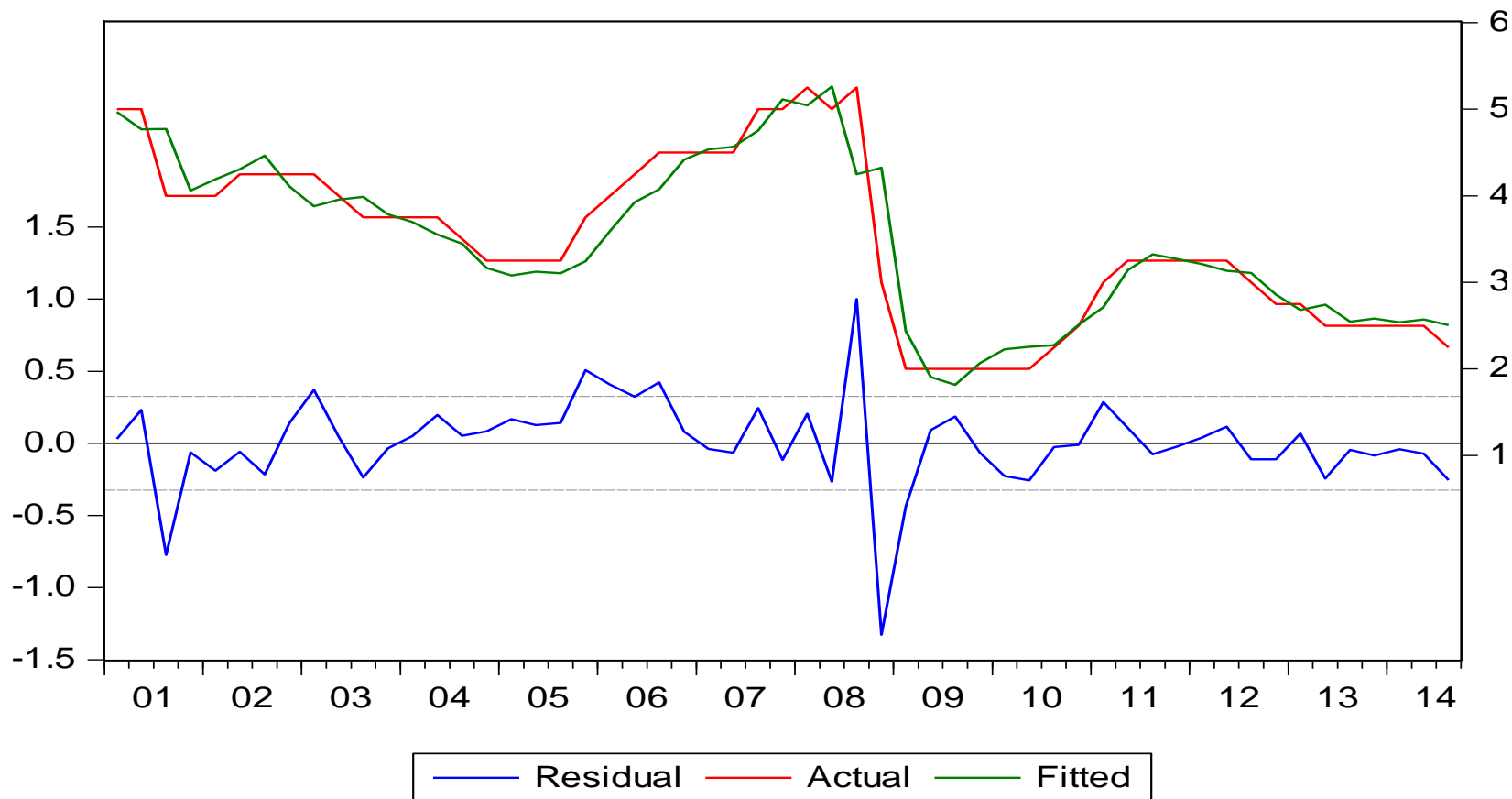
II. 기간: 2001Q1- 2007Q4

	c1		c2		c3		c4	
YoY	0.7643	***	3.0848	***	0.2586	**	0.4283	***
	0.0419		0.3856		0.1241		0.1360	
QoQ	0.7817	***	3.6778	***	0.0471		0.6051	***
	0.0418		0.4296		0.1444		0.1279	

III. 기간: 2008Q1- 2014Q4

	c1		c2		c3		c4	
YoY	0.8665	***	2.6343	***	0.0223		1.7023	***
	0.0364		0.3075		0.1021		0.5262	
QoQ	0.8747	***	3.1993	***	-0.2426	**	1.8113	***
	0.0335		0.2933		0.1012		0.5396	

실제값과 테일러 준칙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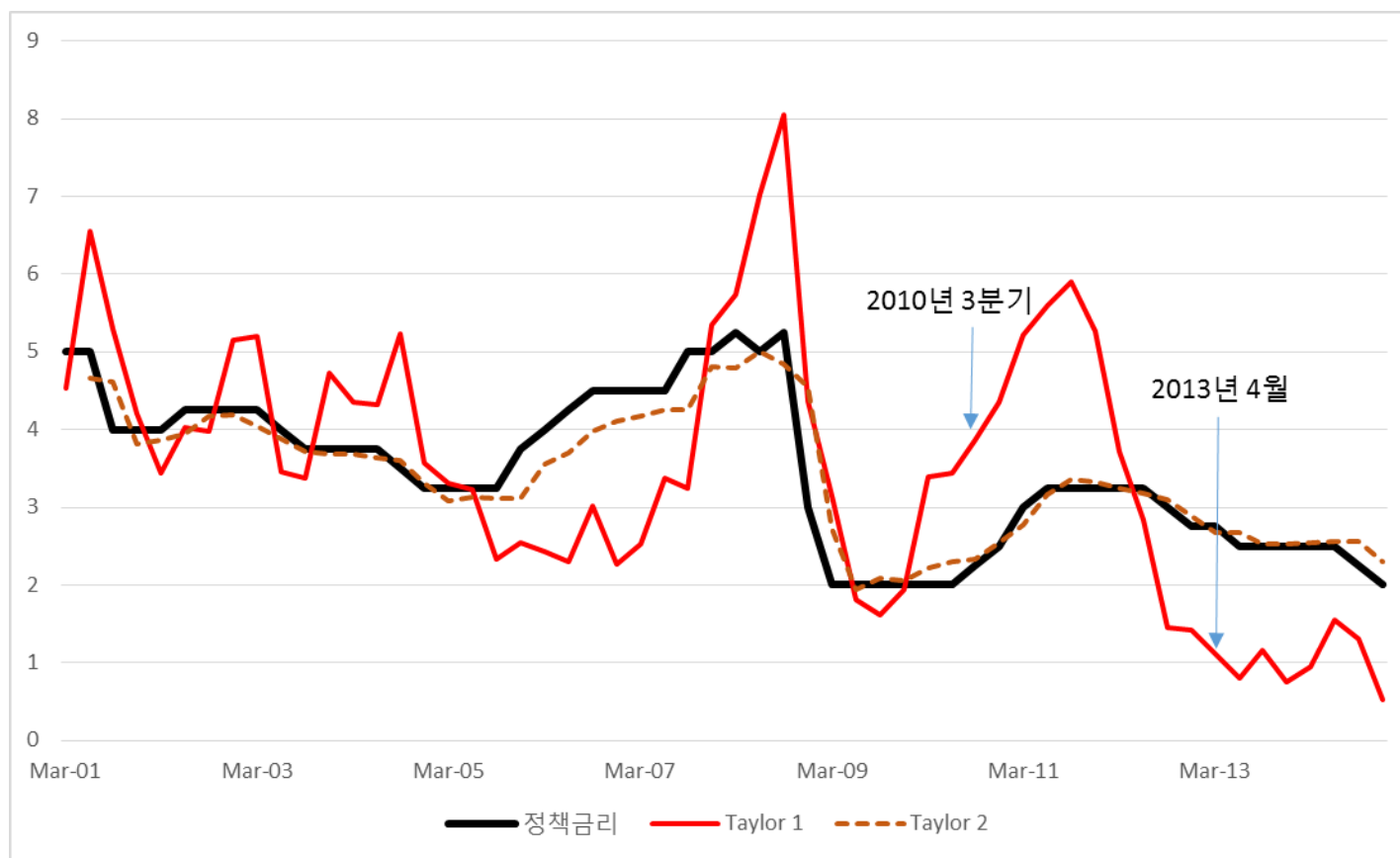
테일러 준칙 추정 결과 (계속)

-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의한 경우에도 1보다 확연히 작음.
- 실질GDP갭에 대한 계수 값은 양의 값으로 클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함.
-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변동에 보다 민감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임.
- 조정계수의 값도 0.8-0.9로 매우 크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 이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그다지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테일러 준칙 추정 결과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GDP갭에 대한 계수가 그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
- 인플레이션에 대해 계수는 더욱 악화되어 심지어 마이너스 값을 갖기도 함
-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
- 통화당국이 경기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강화됨

정책금리와 Taylor 준칙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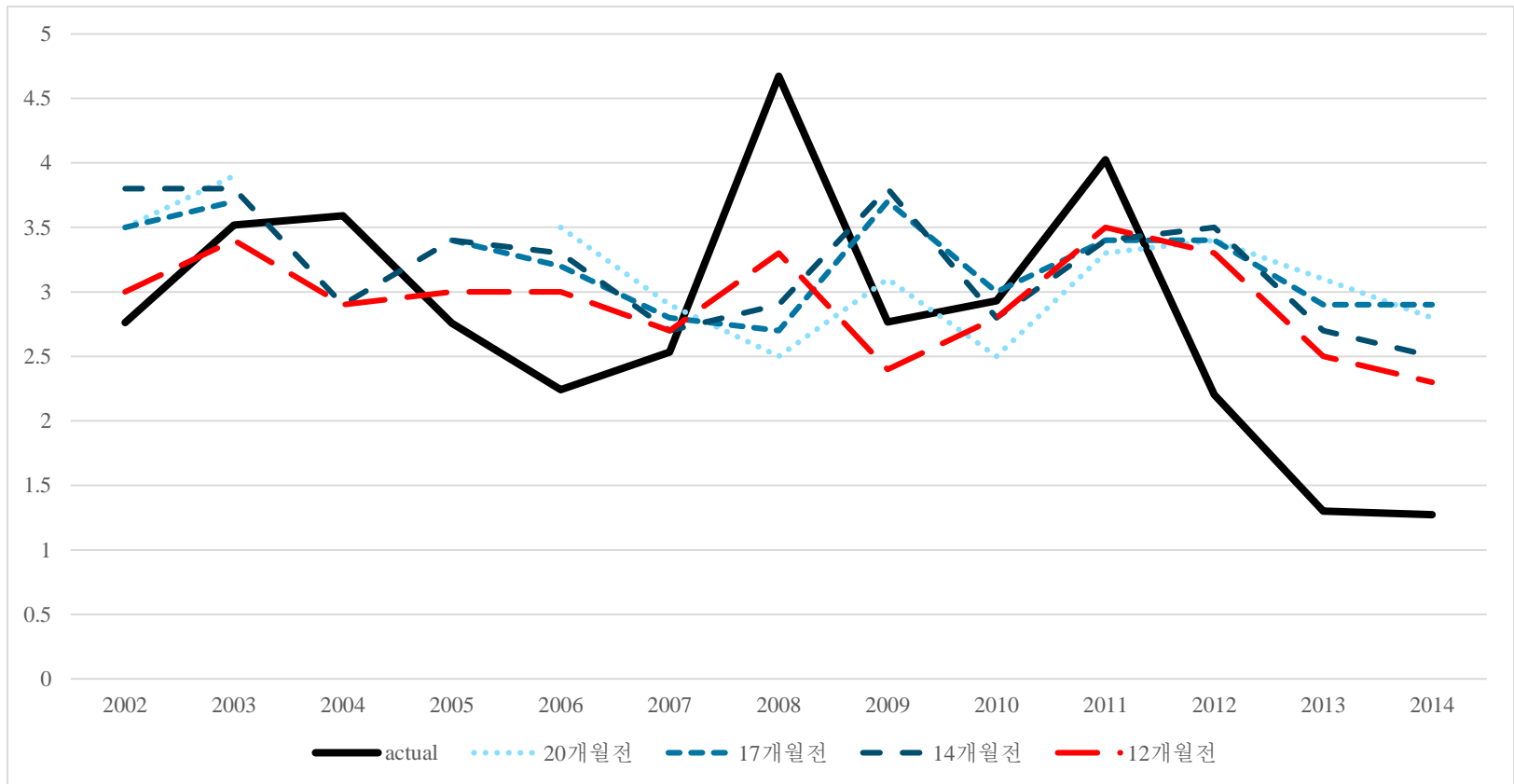
Taylor 1: 미국과 유사한 계수값 즉, $i_t = c + \pi_t + 0.5(\pi_t - \pi^*) + 0.5(y_t - y_t^*)$

Taylor 2: 한국의 2001q1-2007q4 추정치

정책금리와 Taylor 준칙 금리 (cont.)

-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계수값을 사용한 Taylor 준칙금리의 경우(Taylor 1), 실제 정책금리보다 매우 변동성이 높음
- Taylor 1에 따르면 2010년 1분기에 상당한 정도의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했으며 2012년 하반기에 상당한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해 1% 정도가 적정 금리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그 이전과 매우 유사한 정책금리 준칙(Taylor 2)을 따른 것으로 보임- 한은의 물가예측에 상방편이가 있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

한은의 물가예측



한은의 물가예측 (cont.)

- 2012년부터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
- 하지만 물가상승률 예측은 거의 하락하지 않음
- 물가상승률 예측은 2011년까지 편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12년부터는 뚜렷하게 상방편이를 보임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 – 문제의 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

- (1) 금융안정과 IT
- (2) 제로 금리 및 디플레이션 우려
- (3) 새로운 대안?

(1) 금융안정과 I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로 포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전 대부분 중앙은행의 합의된 관점은 통화정책 기능과 금융안정 기능간의 분리:
 - 통화정책은 이중 책무(dual mandate)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통해 행함
- 영국 및 한국에서의 금융감독 분리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의 이분화

- 중앙은행의 일반균형모형은 금융마찰을 경기변동의 주요원인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의 이분화 하에서 두 정책은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됨
- 이는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건전성 규제 및 감독에 맡기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는 교훈

- 금융부문의 변화는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경제활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금융위기의 사후적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
- 물가와 실물경제의 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함
- 결국 사전대응의 필요성 대두

사전대응 수단으로서의 거시건전성 정책

- 하지만 이 때에도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최우선 수단이 되어야 함
 - 신용버블을 야기하는 시장실패는 해결되어야 하며,
 - 거시건전성 규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 통화당국이 금융불안정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 대두

통화정책도 사전대응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버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사용될 수 있음
- 건전성 정책은 핵심 금융회사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비해 정치적 압력 하에 놓이기 쉬움 (가령 Basel III)
 - 신용시장 버블에 대한 사전대응의 기대가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음

금융안정목표와 IT는 양립할 수 있는지?

- 금융안정의 저해는 궁극적으로 물가안정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도 충분히 금융안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꼭 실현되지도 모르는 미래의 금융불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인이 이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움
- 따라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 목표와 어느 정도 tradeoff관계에 놓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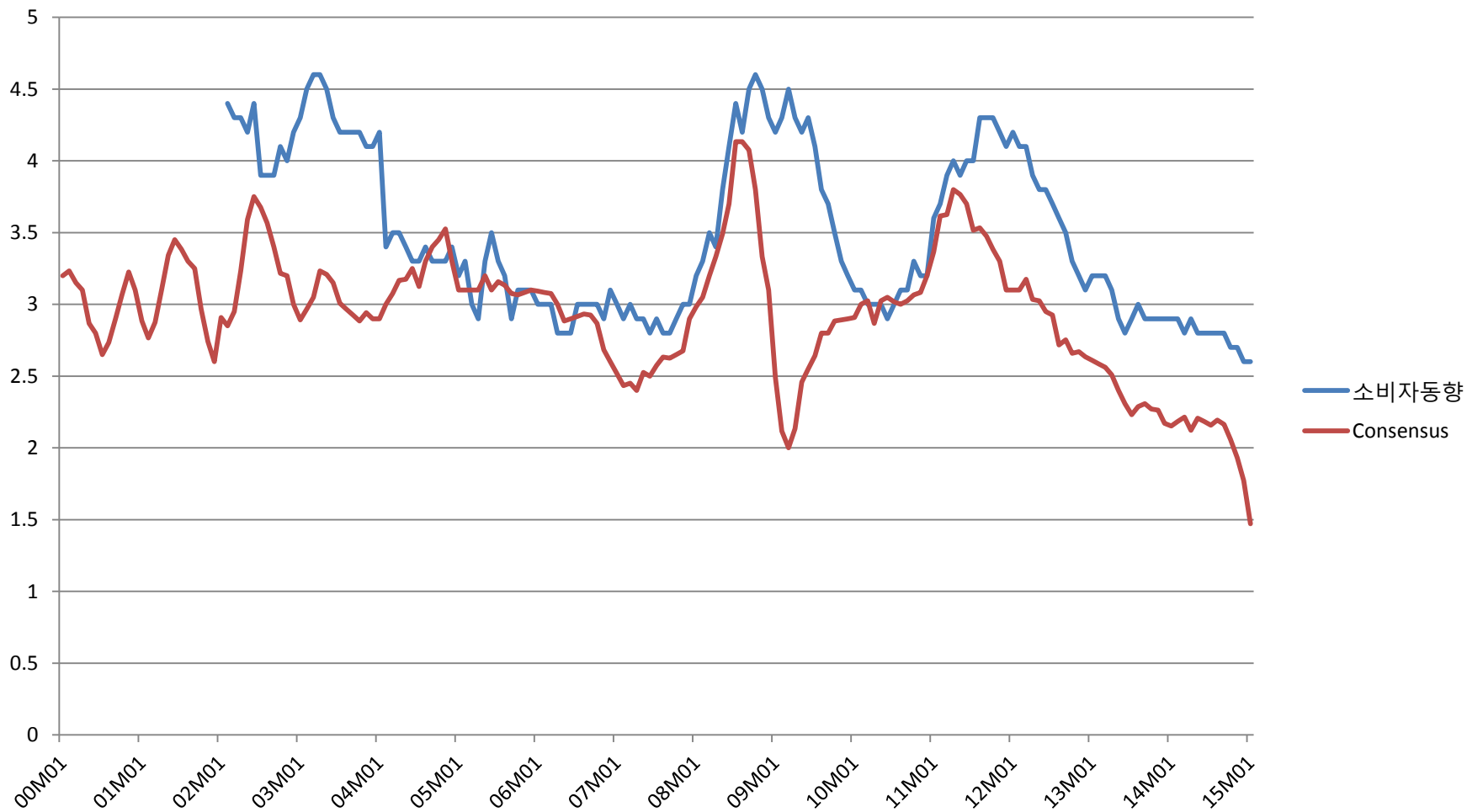
금융안정목표와 IT는 양립할 수 있는지?

- 통화당국자가 금융안정 때문에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최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험
 - 이들 국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하여 물가 및 실물 상황과 부합되는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
 - 이는 인플레이션이 타겟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한동안 머물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낮아짐
 - 통화당국자가 금융안정 때문에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금융안정목표와 IT는 양립할 수 있는지?

- 한국도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금리수준을 낮추지 못함
- 한국의 경우는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를 한은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음
 -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를 한은이 보유하는 경우 LTV, DTI 등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으면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

인플레이션 기대



(2) 제로 금리 및 디플레이션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로 등 주요국들은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렸으나 경기회복이 용이치 않음
-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음
- 일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제로 금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 제로금리는 장차 또 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 제로 금리 하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 제로금리 하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을 경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 신흥시장국가들도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3) 새로운 대안?

- 물가수준 목표제
 - 이론적으로 물가수준 목표제가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 vs. robustness
 - 하지만 저인플레이션 기간 이후엔 고인플레이션을 유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명목GDP 목표제
 - 공급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기대
 - 물가상승률보다 timely하지 않음
 - 명목GDP와 실질GDP의 혼동

5. 결론

결론

- 한은은 IT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 모두 물가상승률보다 경기변동에 유의하여 금리정책을 운용함
- 최근에는 한은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포함됨에 따라 한은은 금융안정에 대한 저해를 우려하여 금리인하를 더욱 주저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IT정책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인데 최근의 경험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

결론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물가상승률 목표에서 멀어져 IT정책을 계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음
- IT의 대안들은 경기침체나 디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지만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어 IT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
- 또한 다른 대안들도 금융안정에 대한 대처에 있어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음
- IT를 채택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신흥시장국가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조를 선불리 바꾸기는 어려움

결론

- 한은이 금융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한은이 IT를 운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 한은은 금융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금리정책은 물가상승률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물가상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